

서울 남서부 지역 조선족 집거지에 대한 연구: 시민권적 접근*

박우**

| 목 차 |

I. 서론: 조선족 집거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V. 시민권적 지위와 거주 기간
II. 자료	VI. 가족 구성
III. 조선족 집거지의 지역사적 배경	VII. 고용-피고용 관계
IV. 인구 규모와 지리공간적 분포	VIII. 결론: 조선족 집거지의 '시민권' 적 함의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시민권 연구의 시각에서 서울 남서부 지역 조선족 집거지(enclave)에 대한 포괄적이고 개관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집거지의 역사적 배경, 조선족의 인구 규모, 한국 입국 시의 시민권적 지위, 한국 내에서의 시민권적 지위의 변화, 거주 기간, 가족 구성, 조선족 사이의 고용-피고용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서울 남서부 지역의 조선족 집거지는 한국 국민, 국민에 준하는 영주, 재외동포와 동포산업인력 등의 시민권적 지위의 정주 조선족으로 구성된 '집거지 노동시장'이었다. 제한 조선족을 한국의 2차 노동시장에 효율적으로 편입시키고자 한 정책들은 오히려 조선족 개인의 능동성에 의해 '집거지 노동시장'을 출현시키는 제도적 역설이 되기도 했다. 집거지 조선족 개인의 시민권적 지위를 이 개인의 거주 양상, 가족 구성, 경제활동 등의 실제 사회경제적 행위의 내용과 함께 고려할 경우, 조선족 개인들의 수직적·수평적 사회경제적 관계로서 집거지는 한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한 측면을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OLU-2250004).

** 한성대학교 상상력교양교육원 조교수.

설명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 주제어: 재한 조선족, 서울 남서부 지역, 집거지, 시민권, 신자유주의

I. 서론: 조선족 집거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1980년대 말부터 한국 사회에 편입된 조선족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통해 가시적인 집단으로 변화했다. 1987년 이전까지 한국 방문자가 매년 1,000명 미만이었다(외교부 1991, 218) 재한 조선족은 2015년 기준 618,673명에 달하는 인구 집단이 되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이 인구는 2010년 제6차 중국센서스 기준 1,830,929명으로 중국 조선족 인구(중국국가통계국 2011)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수부 연길시 도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이다.

1980년대 말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유입된 조선족은 분산적으로 서울의 여러 지역에 편입되었다. 이른바 구로공단 지역의 조선족 집거지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가시화되었고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팽창했다. 2007년 기준 서울 거주 조선족은 127,240명이었고 2015년 말에는 232,456명이었다. 그 중 구로구는 2007년의 17,948명에서 2015년의 41,117명, 영등포구는 같은 시기 21,907명에서 50,964명, 금천구는 10,569명에서 25,508명, 관악구는 10,908명에서 21,352명으로 증가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2016). 서울의 남서부 지역은 2007년 서울 거주 조선족 인구의 48.2%에서 2016년의 59.8%로 증가한, 과반수의 서울 거주 조선족이 생활하는 지역으로 변화했다.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자유주의 또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이주민(또는 소수인종) 집거지 연구는 분절노동시장론의 틀로 설명된다. 분절노동시장은 2차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수요의 공백을 이주민 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채워주는 구조로 작동하고, 동시에 2차 노동시장의 특정 산업에 고용된 이주민 또는 소수인종의 불평등한 경제적 지위를 재생산한다(Piore

1979). 따라서 집거지는 선진 산업국의 분절노동시장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많은 이주민들이 2차 노동시장에 구조적으로 고착화 된 결과로 간주한다(Piore 1975; 1979; Sassen-Koob 1980). 이 집거지는 2차 노동시장의 노동자 외에 상이한 노동시장에 상이한 방식으로 진입하는 같은 민족 이주자(Portes 1976; 1981)와 함께 형성 및 확대되기도 한다.

집거지의 형성의 분절노동시장적 접근은 이 집거지를 노동시장에서 행위자들의 선택의 결과로써 1차 및 2차 노동시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었지만 이 두 노동시장에서 형성되지 않은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의 비공식적 호혜주의에 기반한 ‘집거지 노동시장(enclave labor market)’(Wilson & Portes 1980; Wilson & Martin 1982; Portes & Manning 1986)으로 해석한다. 이들의 관심은 같은 민족(또는 같은 지역 출신 이주민) 피고용자들이 왜 1차 또는 2차 노동시장에 고용되지 않고 집거지 노동시장에 고용되었는가에서 질문이 시작되었다(Portes & Manning 1986). 정리하면 집거지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의 분절을 설명하는 것이 집거지 연구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¹⁾

분절노동시장 접근은 조선족 집거지에 대한 설명에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하지만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집거지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관계는 한 가지 요소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력이나 외국인 신부 등의 유입은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한국의 국가주도적 또는 세계질서 주도적 정치경제 전환의 한 측면으로 출현했기 때문이다. 이 전환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필요에 의해 추진된,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적 경향들을 내재한 세계화였다(Chang 2012). 이 세계화의 한 측면이 바로 한국 사회의 무자비한 정치경제적 양극화의 오래된 희생자들에게 노동시장과 결혼시장의 세계화를 통한 노동과 결혼의 과거적 조건을 재건해 주기 위한 전략적 시도들로(Chang 2014, 172) 구체화되었다. 한국에 도입된 외국인 노동력은 2

1) 집거지는 공간적 용어보다 이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관계에 주목한다. 한국에서 이주민 또는 조선족 집거지는 ‘타운(town)’, ‘로컬리티(locality)’, ‘공간(space)’ 등의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김현선 2010; 정병호·송도영 2011; 이창호 2007; 이희수 외 2008; 최병두 외 2011; 정수열·이정현 2014; 박재영·강진구 2016; 이영민·이용균·이형욱 2012; 방성훈·김수현 2012; 이영민·이은하·이화용 2014; 이정현·정수열 2015).

차 노동시장의 성격에 따라 국가에 의해 그 규모와 지위가 결정되었다 (Seol & Skrentny 2009; Seol 2012). 이런 차원에서 한국(동아시아)에서 이주민 집거지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규정된, 집거지를 구성하는 이주민 개인의 시민권적 지위의 내용도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재한 조선족 인구는 동포이면서 국적이 다른, 그리고 동시에 산업노동력이라는 복잡한 신분에 놓여 있었다(박우 2012; 2017).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권 지위의 조선족들은 서울의 남서부 지역에 어떤 집거지를 형성하였을까? 이 집거지의 함의는 무엇일까?

이런 문제의식하에서 시민권 연구의 한 시도로서 본 연구는 조선족 집거지에 대한 이론화와 개념화를 하기에 앞서 포괄적이고 개관적 수준에서 이 집거지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를 정리하고 이 집거지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구로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주 및 산업 공간의 역사적 배경을 정리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재한 조선족 인구가 어떤 시민권적 지위로 구성되었는지 정리한 후 이 지위하에서의 거주, 가족 구성, 노동시장 등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크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통계연보』(2008-2016),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2008-2016)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08-2016) 등 정부 통계와 2013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서울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이다. 본 연구자는 이 사업의 조사를 책임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이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집된 자료의 조사 기간이 종료된 후 추가로 입수한 설문 자료를 추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라고 부르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조선족(중국동포)이고 조사 내용은 조선족의 기초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표집 방법은 전체 조선족 모집단의 정확한 분포를 파악하기 어렵고,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해도 설문조사를 정확

하게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조사원이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설문 조사를 하고, 일부 조선족(중국동포)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조사를 하는 등의 눈덩이표집 방법을 채택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이 기술적 한계는 있지만 이 자료가 특정 지역에 밀집하고 있는 조선족 주민이라는 ‘초점 집단(focus group)’을 선정하고 진행한 조사이기 때문에 밀집 지역 조선족 주민의 개관을 보여주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후속 조사를 통해 자료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양한순·박우(2013)의 논의를 참조하라.

본 논문에서는 이 설문조사 자료 중 구로공단을 둘러싼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의 조선족 주민들을 선별하여 분석했다. 물론 자치구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로공단과 인접한 관악구의 행정동과 멀리 떨어진 낙성대동의 조선족을 모두 집거지 조선족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선별된 지역의 조선족 주민이 거의 모두가 구로공단에 인접한 행정동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분석적 편의에 의해 자치구를 기준으로 했다.

Ⅲ. 조선족 집거지의 지역사적 배경

조선족 집거지가 위치한 영등포구 구로동 지역은 1960년대 이전까지 서울 중심가와 동떨어진, 원주민은 별로 없는 한적한 변두리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논과 밭,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야산에는 미8군 탄약고가 자리했다. 이곳은 서울 중심가의 재개발로 인한 도심 지역의 이주민들이 형성한 난민촌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당시 구로동 전체 인구는 2만 8천여 명, 가옥은 5,442호였다. 1964년에 설립된 수출공업단지육성위원회는 서울의 구로동 지역에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기로 결정했다. 공업단지(Industrial Estate)는 “향후 입주할 기업체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사전에 일단의 토지를 통합 개략조성하고 때로는 공장건물까지 사전에 세워 집단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 조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업단지에는 철도, 도로, 동력, 용수 및 기

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 또는 공동시설도 설치된다(한국수출 산업공단 1994, 169-171). 이런 의미에서 공업단지는 단순히 공장만 있는 공장지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산업으로 포괄적으로 구성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었다. 수출공업단지 조성계획에 의해 1964년 12월부터 1966년 말까지 구로동 제1공업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이어 1967년부터 1968년까지 1단지의 서쪽에 제2단지, 1970-1973년 제2단지와 인접한 서쪽에 제3단지가 건설되었다.

구로공단은 “수출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제일교포의 재산과 기술을 도입하여 서울 근교에 경공업 중심의 한 ‘수출산업단지’를 설정”한다는 목표 아래 조성되었다. 그런데 제1단지 조성 과정에서 제일교포의 투자는 초기 예상처럼 활발하지 못했다. 따라서 제2단지 조성부터 정부는 대기업의 유치를 통해 단지의 일부 빈자리를 메웠다. 구로공단은 준공 직후부터 입주기업 생산제품의 내수판매가 허용되기도 했다. 수출의무 규제는 1970년대 말부터 완화되었고, 동시에 소규모 도시형 내수기업들의 구로공단 내 입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로공단은 수출지향 공업화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에 따라 조성되었지만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산업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변모하였던 것이다(이상철 2012). 국가중심적 수출산업 정책과 개발 정책의 전략적 변화는 서울 남서부 지역의 도시화를 촉발 및 촉진했다.

경인선과 경부선의 분기 지역에 형성된 구로공단은 이후 공단에 고용된 노동력의 주거 지역과 함께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하나의 ‘지역(local)’이 되었다. 서울로 모여든 지방 및 농촌 인구가 공단 지역으로 몰려드는 한편 공단에 고용된 노동력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단 지역에는 넓은 주거 지역이 형성되었고 자연스럽게 여러 종류의 서비스업도 성장할 수 있었다. 1990년 ‘구로단지 첨단화 계획’으로 추진된 공단 지역의 산업구조조정은 도시 주변부의 서비스업을 확대하기도 했다(손정순 2012). 구로공단 지역은 제조업과 (주변부)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공단 노동자들이 밀집 거주하는 ‘집거지(enclave)’이기도 했다. 이곳은 한국 산업화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담은 지역이었다.

구로공단 지역은 한국 노동계급의 1세대를 출현시킨(Koo 2002, 23)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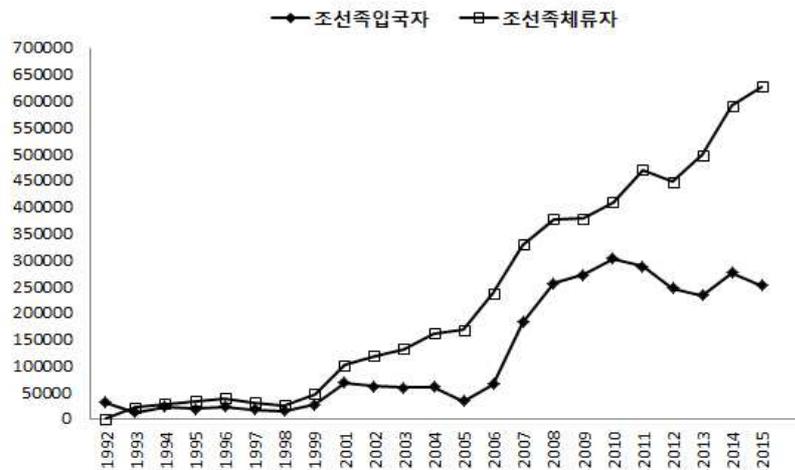
이기도 했다. 1970년대를 경과하면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확대된 노동운동과 민주화에 구로공단 노동자들도 중요한 공헌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5년의 구로동맹파업이었다. 한국 산업화 과정에 민주화를 위한 정치투쟁과 긴밀한 연계를 둔 노동운동 중 이 투쟁은 1980년대 전반에 발생한 노동투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투쟁이었다. 구로연대투쟁은 한국 노동운동의 주요 전환점이 되었고 다가올 노동계급운동의 전조가 되기도 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이런 중요한 유산을 계승했다(Koo 2002, 184-186). 구로공단 지역은 한국 노동계급 형성의 역사성과 노동운동 및 민주화운동의 현장성이 구현되는 지역이었다.

공단이 건설되고 노동력이 밀집하는 한편 산업화를 동반한 서울의 도시화로 인하여 서울은 행정구역을 신설할 필요를 느꼈다. 그중 영등포구에 속해 있던 구로 지역이 1980년에 구로구로 신설되었다. 구로구는 신설 당시 구로동, 가리봉동, 시흥동, 독산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궁동, 온수동, 천왕동, 향동, 신도림동으로 이루어졌다(서울특별시 구로구 1997, 29-30). 공단 제1단지는 구로구에 편입되어 이후 ‘구로디지털단지’로 불렸다. 1963년부터 1973년까지 경기도 시흥군 동면에서 서울시 영등포구의 일부 지역으로 편입되었던 관악구 지역은 1973년 영등포구에서 관악구로 분리 신설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관악구는 구로공단과 조원동, 신사동, 미성동 등 행정동을 인접하는 자치구가 되었다(서울시 관악구 1996, 55-57). 금천구는 1995년에 구로구로부터 시흥동, 가산동, 독산동이 분리되어 신설된 자치구이다. 가산동에는 공단 제2단지와 제3단지가 위치해 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1996, 36-37). ‘가산디지털단지’로 불리는 지역이 바로 이 두개의 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이렇게 과거 영등포구의 구로 지역에 건설되었던 공단은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성장하는 한편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의 인접 지역으로 거듭났다. 서울의 남서부에 위치한 구로공단 및 인근의 노동력 집거지는 최소 네 개의 자치구가 ‘공유’하는 지역이 되었다. 구로공단 지역은 한국의 도시화 경험과 도시 관리의 정책적 실천들이 구현되는 곳이었다.

IV. 인구 규모와 지리공간적 분포

중국의 조선족 사회는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탈사회주의 전환 과정에 급격하게 분화했다. 사회경제적 상층부로 진입한 조선족은 중국 주류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조선족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아야만 했다. 이 인구는 신자유주의 전환기 한국의 노동시장 분절과 생산직 노동력의 수급난과 맞물려 한국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식 자유주의의 불평등한 결과가 양산한 인구가 한국의 신자유주의의 불평등한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다(박우 2017). 이들은 한국의 2차 노동시장의 거의 모든 부문에 편입되어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그림 1> 연도별 조선족 입국자와 체류자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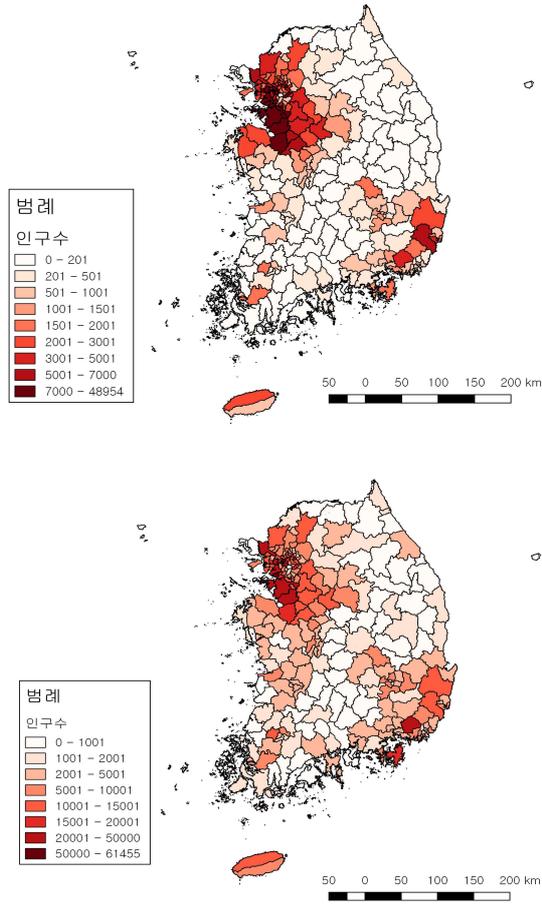
2) <그림 1>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6&strWrtNo=111&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50&strAllOrgYn=N&strThisPage=2&strFilePath=. (2017년 1월 2일 검색)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지역은 공단 노동자의 유출과 함께 새로운 유입 인구인 조선족 등의 이주민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 지역의 주거비용은 높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은 이주민(또는 외국인 산업노동력)의 유입과 거주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하지만 재한 조선족의 시민권적 지위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안정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한국 입국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는 1990년대에는 구로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적인 밀집과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생활과 생산 활동은 가시적이지 않았다.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고 2007년부터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되면서 구로공단 주변 지역은 재한 조선족이 밀집한 가시적인 생활과 생활의 지역이 되었다.

<그림 1>은 재한 조선족 유입 및 체류 인구이다. 조선족 입국자와 체류자는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1992년부터 전반적인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1992년 조선족 입국자는 31,005명, 2015년은 251,916명이었다. 같은 시기 체류자는 419명에서 626,655명으로 증가했다. 입국자와 거주자 규모는 두 번의 확연한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첫 번째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이고, 두 번째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라는 점이다. 조선족 인구의 증가가 한국의 정치경제구조의 신자유주의 전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족 입국자는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의 추세를 돌아섰다. 이는 중국 조선족 인구 180여만 명 중 1950년대 후반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 인구 중 한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그림에도 조선족 체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입국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중국에서 정규적인 교육이 끝난 후 한국에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목적으로 입국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유입된 조선족들은 경부선과 호남선의 산업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했다(<그림 2> 참조). 조선족 인구의 분포 특징은 다른 외국인 집단에 비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밀집이 두드러진다는 것이고, 대부분 인구가 산업도시에 분포해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은 농어촌에 넓게 분포한 데 비해 조선족은 산업공단 및 인근, 그리고 서비스업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도시 중심의 분포 특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국내 조선족 분포(상)와 외국인 노동력 분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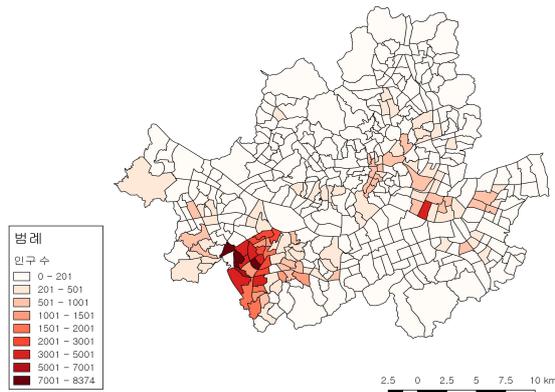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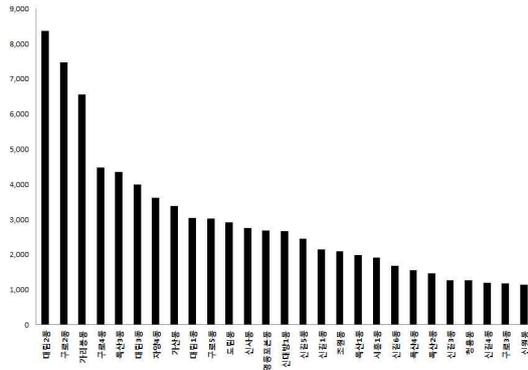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9/30 기준)

서울의 조선족은 25개 자치구에 모두 분포해 있었다. 영등포구의 조선족 인구는 48,954명, 구로구는 41,098명, 금천구는 25,331명, 관악구는 20,991명 이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1/4분기 기준). 이 4개 자치구의 조선족 인구는 2007년 방문취업제도의 시행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지역의 조선족 인구의 비율은 전체 외국국적자의 규모를 결정했다(행정자치부 2008-201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2016). 구로공단을 둘러

싼 4개 자치구의 한국인 주민등록인구는 2007년 이후 큰 폭의 등락이 없었다. 하지만 외국국적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4개 자치구의 2008년과 2015년 외국국적자 비율을 보면, 구로구는 6.4%에서 10.1%, 영등포구는 8.9%에서 13.3%, 금천구는 7.3%에서 11.0%, 관악구는 2.6%에서 5.2%로 증가했다. 이 4개 자치구는 대다수의 한국인과 평균적으로 약 10% 전후의 외국국적자들로 구성되었다(행정자치부 2008-2016). 구로공단 지역 행정동 중 조선족 절대인구 규모를 보면 영등포구 대림2동에 8,37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구로구 구로2동으로 7,475명이었다. 구로구 가리봉동이 6,561명, 구로4동이 4,473명에 달했고 금천구 독산3동 4,359명, 영등포구 대림3동이 3,993명으로 뒤따랐다. 이어 금천구 가산동 3,392명, 영등포구 대림1동 3,041명, 구로구 구로5동 3,028명이었다(<그림 3> 참조). 구로공단 1단지의 위치가 구로구 구로3동, 2단지와 3단지의 위치가 금천구 가산동인 점을 감안하면 재한 조선족 및 기타 외국국적 산업 인력의 밀집 지역은 바로 구로공단을 둘러싼 4개 자치구의 행정동이 되겠다. 조선족 거주 지역은 먼저 독산동, 가리봉동, 구로동 등 지역을 중심으로 출현하였고 이 지역의 인구 수용 능력이 포화되면서 신규 유입자들은 인근 거주 지역인 대림동 등의 지역으로 확장했다. 구로공단 지역의 조선족 집거지는 이제 하나의 가시적인 지역이 되었다.

<그림 3> 서울시 행정동별 조선족 분포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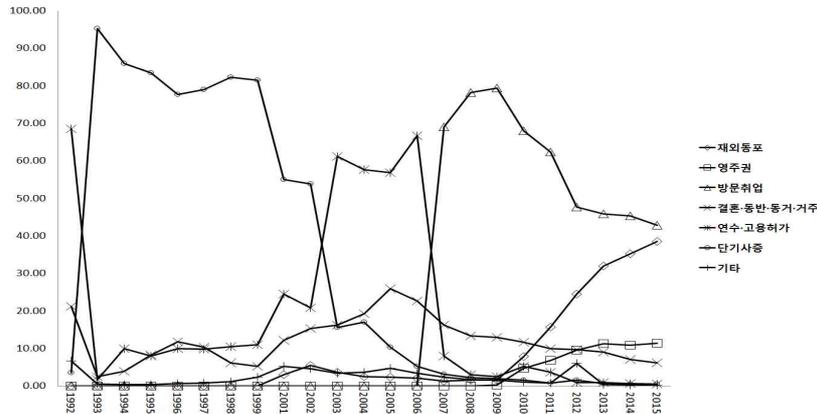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1/4분기 기준)

V. 시민권적 지위와 거주 기간

한중 수교 이후부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조선족은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외국인 산업인력 정책의 동시적 영향을 받으며 입국했다. 이들의 입국 규모와 시민권 지위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조선족의 체류 자격 구성은 다양했고 동시에 이 구성은 시기에 따라 변화했다. 1993년 단기사증 비율은 95.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2015년에는 0.5%로 감소한다. 산업연수 및 고용자격의 조선족은 1992년 68.5%에서 2015년의 0.5%로 감소했다. 결혼 및 동거 자격의 조선족은 1992년의 21.2%에서 2015년의 6.2%로 감소했다. 방문취업 자격의 조선족은 2007년의 69.0%에서 2015년의 42.8%, 재외동포 자격은 1.3%에서 38.5%, 영주 자격은 0.03%에서 11.4%로 변화했다(<그림 4> 참조). 제한 조선족 인구의 대부분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주로 단기 자격, 산업 및 고용, 결혼 등의 사회경제 활동이 제한된 시민권적 지위하에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동포산업인력 지위가 인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민권 지위의 조선족 인구가 증가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방문취업 자격, 재외동포 자격, 영주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제한 조선족을 구성한 대부분의 인구는 사회경제적 자율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

된 시민권적 지위하에서 거주, 생활, 노동하는 집단이다.

<그림 4> 조선족의 체류자격별 한국 체류자(비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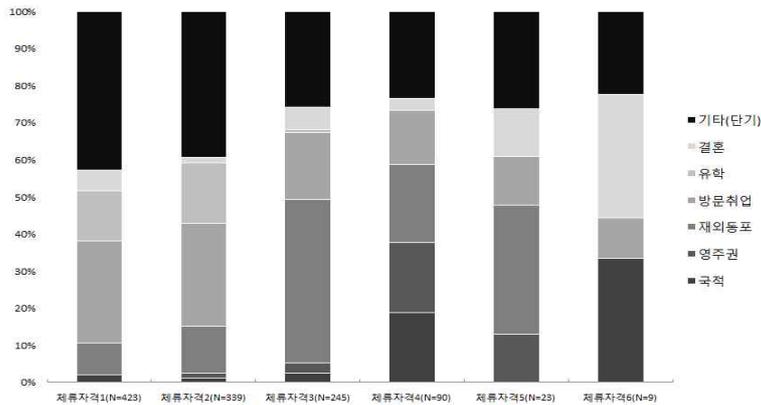


조선족은 개인 차원의 자원, 자본 및 기능적 역할에 따라 한국 진입 시의 시민권 지위가 결정되었다. 그런데 이 지위는 영구불변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공헌적 역할이 인정되면 다른 시민권적 지위를 변경(획득)할 수도 있었다. 이들은 국가가 규정하는 기능적 조건들을 갖춘 후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거나 재외동포, 영주권 등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법적 지위의 변경을 통해 거주가 보장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면서 이들의 한국 체류는 임시적이 아닌 정주로 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 허용으로 이들은 장기거주가 가능한 시민권 지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집거지 조선족 423명의 한국 입국 시 시민권 지위와 현재의 시민권 지위의 구성을 보면, 한국국적 1.2%에서 17.4%, 영주권 1.2%에서 9.9%, 재외동포 자격은 12.7%에서 42.6%, 방문취업 자격은 27.7%에서 19.3%, 유학 자격은 16.5%에서 2.4%, 결혼 자격은 1.5%에서 2.8%, 기타 단기 자격은 39.2%에서 5.6%

3) <그림 4>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6&strWrtNo=111&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50&strAllOrgYn=N&strThisPage=2&strFilePath=. (2017년 1월 2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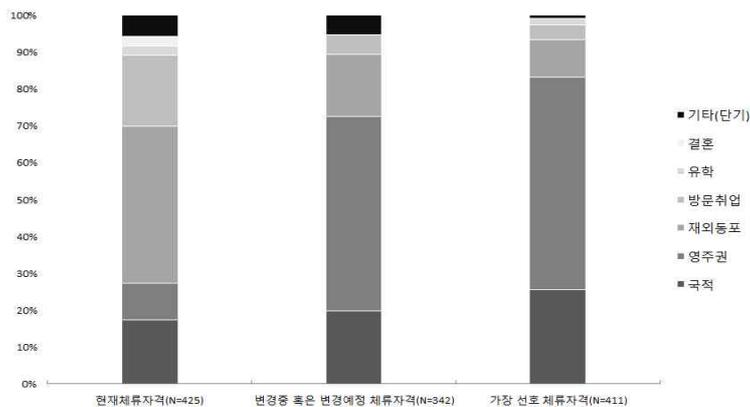
로 변화했다(<그림 5>, <그림 6> 참조). 이 사람들은 적게는 1회, 많게는 5회의 지위 변경을 통해 국민 또는 국민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고자 했다.

<그림 5> 밀집 거주 지역 조선족의 거주(체류) 자격 변경 양상



▪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그림 6> 현재의 법적 지위, 변경 예정 법적 지위, 선호 법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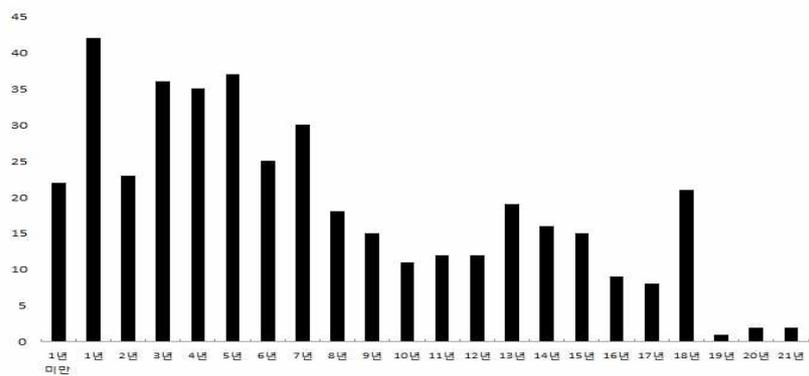


▪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집거지 조선족들 중(425명) 342명이 현재 시민권 지위를 다른 지위로 변경 중에 있거나 변경 예정이었다. 변경 예정 시민권 지위의 구성을 보면 국적 19.9%, 영주권 52.6%, 재외동포 17.0%, 방문취업 5.3%, 기타 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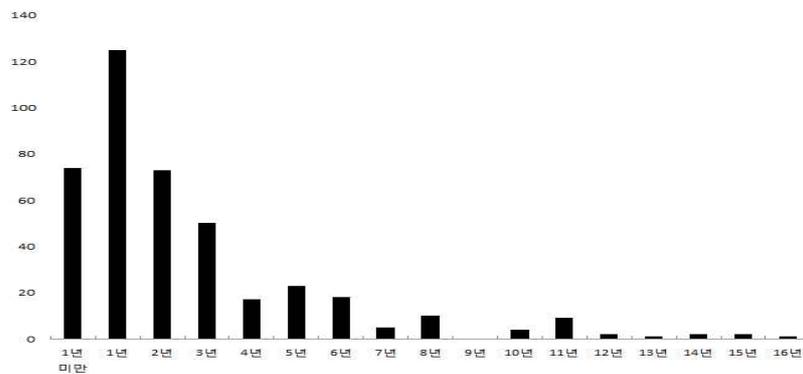
가 5.3%였다. 영주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국 국적과 재외동포 자격이었다(<그림 6> 참조). 시민권적 지위의 변화를 통해 국민 또는 국민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다. 이 시민권적 지위는 거주 기간과 노동(고용) 기간을 엄격하게 연동하지 않았다. 물론 1990년대 초반에 입국한 조선족들은 미등록자로 전락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시민권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 미등록자들은 대부분 합법화되었고 다른 외국인들과 구분되는 시민권 지위가 인정되었다.

<그림 7> 한국에서 거주 또는 생활한 기간(N=411)



·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그림 8> 현재 밀집 거주지 거주 기간(N=416)



·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이들은 한국에서 길게는 21년, 짧게는 1년 미만의 생활 경력이 있었다 (<그림 7> 참조). 조사 시점이 2013년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21년이라는 것은 한중수교의 해인 1992년부터 한국에서 생활했다는 의미이다.⁴⁾ 한국 생활 기간과 더불어 현재 거주지인 집거 지역에서 생활한 경력을 보면 길게는 16년, 짧게는 1년 미만이었다(<그림 8> 참조). 현재의 집거지 조선족 주민들은 2007년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입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에서의 신규 유입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이 지역으로 유입된 사람들도 있었다.⁵⁾

이들의 한국에서의 기대 거주 기간을 보면(<표 1> 참조) 정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33.8%였다. 50.4%는 몇 년 더 생활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그 외 구체적으로 1년부터 20년까지 다양한 체류 기간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에 편입된 조선족 인구 중 상당수가 한국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표 1> 한국에서의 기대 거주 기간

	기간	사례 수	비율(%)
기간	1-5년	56	11.9
	6-20년	15	3.9
살 수 있을 때까지		130	33.8
잘 모름		193	50.4
전체		385	100.0

▪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4) 물론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중국이나 제3국으로 다녀올 수도 있다. 생활 기간은 상대적 거주 시간이 많은 곳을 말한다.

5)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에 비해 집거지에서의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집거지 조선족의 정주 경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거지 조선족의 가족 구성을 추가로 언급하였다.

VI. 가족 구성

집거지 조선족의 안정적인 시민권 지위는 이들의 가족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초기 조선족의 한국 이주는 주로 개인이주였다. 1990년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서 여성이 많고 높은 연령대에서 남성이 많은 등 연령별 성비가 불균형을 보인 것도 개인이주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박우 2015). 또한 조선족의 ‘초국적 가족화’(박광성 2006)는 초기의 개인 이주에 의해 구성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조선족의 가족 구성원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정책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완화되면서 초기의 현대판 ‘이산가족’은 재결합하거나 국경을 넘나들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 이 가족 구성원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함되었다.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들도 부모의 시민권 지위에 연동하여 동반 거주 자격이 부여되었다.

집거지 조선족 응답자의 가족 구성을 보면 한국에 자녀 1명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37.8%를 차지했고, 자녀 2명은 9.5%, 자녀 3명은 1.5%였다. 한국에는 자녀가 없지만 중국이나 기타 국가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 51.2%였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 중 절반 정도가 한국에서 최소 1명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표 2> 참조).⁶⁾

<표 2> 밀집 지역 조선족 가족의 한국 내 자녀 수

자녀수	1명	2명	3명	중국 및 기타	전체
비율	37.8	9.5	1.5	51.2	100.0 (N=301)

·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다음 전체 자녀수와 한국에 있는 자녀수를 살펴보았다(<표 3> 참조). 전체 자녀수가 1명이면서 이 자녀가 한국에 있는 사람은 212명, 전체의 40.2%였다. 전체 자녀수가 2명인 사람은 71명이었는데 그중 자녀 1명이 한국에 있는 경우는 33.8%, 자녀 2명 모두 한국에 있는 경우는 25.4%였다. 전체 자녀수가 3명인 경우는 총 6명이었는데, 그중 자녀 1명이 한국에

6) 응답자와 자녀는 동거할 수도 별거할 수도 있다.

있는 경우는 16.7%, 자녀 2명이 한국에 있는 경우는 16.7%, 자녀 3명 모두 한국에 있는 경우는 50.0%였다. 이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전체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표 3> 밀집 지역 조선족 가족의 전체 자녀수와 한국 내 자녀

전체 자녀수	1명(N=212)		2명(N=71)		3명(N=6)	
한국 자녀수	1명	1명	2명	1명	2명	3명
비율	40.2	33.8	25.4	16.7	16.7	50.0

▪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 자녀 4명 중 1명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2사례 있음. 표에서는 제외함

자녀의 거주 지역과 더불어 배우자의 거주 지역까지 함께 살펴보았다 (<표 4> 참조). 2인 가구인데 구성원 모두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14.9%, 3인 가구이면서 구성원 전체가 한국에 있는 경우가 7.7%, 4인 가구이면서 구성원 전체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1.5%로,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한국에 있는 비율은 24.1%였다. 그 외 한국과 중국에 가족이 흩어진 경우는 49.9%, 한국과 제3국은 2.4%, 한국, 중국, 제3국은 3.1%였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한국에 거주하는 비율이 24.1%라는 것은 조선족 가족이 초국적 양상을 보이는 동시에 상당한 수준으로 한국에서의 가족 재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20.6%에 달하는 미혼자들도 한국에서 배우자를 찾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가족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표 4> 밀집 지역 조선족 가족 구성원의 거주 지역

가족 유형	사례		비율	
미혼	94		20.6	
2인 가구	68	110	14.9	24.1
3인 가구	35		7.7	
4인 가구	7		1.5	

▪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 전체 457사례 중 비율임

<표 5> 밀집 지역 조선족 자녀의 현재 교육과정

교육과정	현재 교육과정 비율	시작 교육과정 비율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45.7	80.2
초등학교	43.2	8.6
중학교	12.3	6.2
고등학교	2.5	0.0
대학교	17.3	23.5
대학원	19.8	12.3

▪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 일부 가족의 자녀는 1명 이상이기 때문에 비율의 합은 100%보다 큼

조선족 자녀의 교육기관 편입 상황을 통해서도 가족 단위의 정주 경향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자녀가 있는 사례는 81사례였다. 그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45.7%, 초등학교는 43.2%, 중학교는 12.3%, 고등학교는 2.5%였다. 이 자녀들 중 80.2%가 한국의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치원부터 다녔다. 그 외 초등학교부터 다닌 경우는 8.6%, 중학교는 6.2%였다. 이 표를 통해 조선족 자녀들이 한국의 초기교육부터 편입되어 부모의 한국 정주와 함께 유아, 초등, 중등, 고등학교 및 그 이상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에서 정규적인 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참조). 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녀는 중국에서 고등학교나 학부를 졸업하고 유학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실제로 대림동 D초등학교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2014년 4월 기준 전교생 518명 중 182명이 국제결혼가정이나 외국국적자 가정의 자녀였다. 이는 전체 학생 수의 3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비율은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높아져 1학년과 2학년은 55%에 달한다. 외국국적자 가정 중 부모가 모두 조선족인 가정의 자녀는 1학년은 20명, 2학년은 11명, 3학년은 22명, 4학년은 21명, 6학년은 6명이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까지 합치면 조선족 또는 조선족 출신 가정의 자녀 규모는 더욱 커진다(조미정 2015, 20 <표II-14> 참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가족이주에 기초

한 한국생활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중국에서 생활하던 자신의 자녀를(정책적으로 중도입국자녀라고 함) 한국의 공식 교육기관에 입학시키고 있었다. 안정적 시민권적 지위는 활발한 가족이주를 통한 조선족 인구의 한국 정착을 뒷받침했고 밀집 지역의 확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VII. 고용-피고용 관계

조선족의 시민권적 지위는 한국의 2차 노동시장에서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었다. 집거지 거주자들 중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구로공단의 중소제조업에 편입되기도 했다(박우 외 2015). 그 뿐이 아니다. 집거지 조선족 노동력은 집거지 조선족 사업가에 고용되어 ‘집거지 노동시장(enclave labor market)’을 구성하고 있었다.

<표 7> 고용주 국적별 근로자의 주관적 언어 능력

언어 구분	고용주 국적 구분	잘함	보통	못함	전체
중국 조선어	조선족(N=81)	83.7	16.3	0.0	100.0
	한국인(N=196)	81.2	17.3	0.0	100.0
한국어	조선족(N=81)	63.0	32.6	4.3	100.0
	한국인(N=196)	63.1	32.3	4.5	100.0
중국어(한어)	조선족(N=81)	65.2	32.6	2.2	100.0
	한국인(N=196)	52.0	40.4	7.6	100.0

▪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 ‘조선어’는 중국에서 배운 조선어문(한글)을 말함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졌듯이 ‘같은 민족’의 고용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언어였다. 집거지 조선족 사업가에 고용된 조선족 노동자와 한국인에 고용된 조선족 노동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보였다. 중국에서 배운 중국조선어와 한국어의 주관적 구사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한어(중국어) 능력은 차이가 보였다. 조선족에 고용된 조

선족 노동자는 한어 능력이 “잘함” 65.2%, “보통” 32.6%, “못함” 2.2%인데 비해 한국인에 고용된 조선족은 “잘함” 52.0%, “보통” 40.4%, “못함” 7.6%였다. 다시 말하면 한어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조선족들이 조선족 사업가에 고용되고, 반대로 한어 자신감이 낮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인 사업가에 더 고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족 사업가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고용된 조선족 노동자의 월급을 결정하였다.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이들의 경력이었다. 그 다음은 일의 강도, 즉 노동의 양이었다. 조선족 사업가들은 육체노동 종사자를 많이 필요로 하기에 노동의 시간과 노동의 양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세 번째는 연령이다. 아마도 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할 수 있는 일의 종류와 해결할 수 있는 노동의 양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사업가들은 민족 변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는 사업가들이 특정 민족을 차별하거나 우대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업체 내부의 분업으로 인하여 서로 기능적으로 다른 민족이 상이한 부분에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월급을 차등 지급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조선족 종업원과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한족 요리사는 민족이 다를 수 있고 일의 강도와 노동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월급도 다르다. 그리고 여행사의 경우 언어적 한계로 한족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 일의 양이 조선족의 그것보다 적다. 이러한 차이가 임금의 차등 지급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민족 변수는 민족 그 자체보다는 기능적 역할에 따라 임금 차이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성별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표 8> 사업가에 고용된 노동자의 월급 결정 요인들(사업가 기준)

구분	N=110	구분	N=110
성별	22.3	경력	63.8
연령	35.4	일의 강도	51.8
민족	28.1	기타	28.1

▪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 기타에는 ‘학력’, ‘비자유형’ 등이 포함됨

이러한 기준에 의해 조선족 사업가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월 166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일평균 11.1시간을 노동했다. 이들의 월 평균 휴식일은 4일이었다. 한국인에 고용된 조선족 노동자들의 경우 월 160.9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일평균 11.1시간을 노동했다. 이들의 월 평균 휴식일은 6일이었다. 단순 수치적으로만 보면 조선족 사업가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한국인에 고용된 조선족 노동자에 비해 일 근로시간은 비슷하지만 월 근로일은 많음으로써 좀 많이 일하고 좀 더 받는 노동조건에 있었다.

<표 9> 사업가에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시간, 휴식일, 월 소득

	소득	일 근로시간	월 휴식일
조선족 고용주(N=81)	166.0 (99.6)	11.1 (3.0)	4.0 (1.9)
한국인 고용주(N=196)	160.9 (89.9)	11.1 (3.0)	6.2 (6.9)

▪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집거지의 조선족 사업가는 주로 서비스업에 분포했다. 그중 요식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 다음으로 노래방, 무역회사, 여행사 등의 비중이 컸다. 그 외에 핸드폰가게, 의류가게, 컴퓨터가게, 중국식품점, 유통회사, 화장품가게, 행정사, 미용실, 안마 등의 업종에 분포해 있다(<표 10> 참조).

<표 10> 집거지 조선족 사업가의 사업 업종

사업 종류	2013년 (N=124)	2008년 (N=61)	사업 종류	2013년 (N=124)	2008년 (N=61)
식당	37.8	62.2	한중 무역회사	12.7	--
노래방	14.0	16.4	여행사	11.0	8.2
핸드폰가게	2.0	1.6	화장품가게	2.0	--
의류가게	1.3	1.6	기타	6.0	--
컴퓨터가게	1.3	--	안마	--	3.3
중국식품점	3.3	--	행정사	--	3.3
주류유통회사	0.7	--	미용·네일아트	--	3.3

▪ 서울 거주 중국동포 조사(2013); 2013 가리봉동 사업체 조사(2013)⁷⁾

▪ 2013년 자료에서 사업가들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 있기에 전체 퍼센트는 100%가 아님. 2008년 자료의 경우 전체 퍼센트는 100%임

7) 이 자료는 본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것이다.

조선족들이 2차 노동시장과 집거지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노동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민권적 지위였다. 그런데 조선족의 시민권적 지위는 일부 조선족에게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정책적 보장이 되기도 했다. 보통 ‘이주민 사업가(immigrant entrepreneur)’ 또는 ‘이주민 경제(ethnic economy)’ 연구는 사업가의 공급 가능한 자원(계급적, 민족적)과 사업가의 상품을 필요로 하는 시장의 수요 사이의 관계, 즉 수요-공급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Light & Karageorgis 1994; Light & Gold 2000). 그런데 이주민 개인이 한 법인의 실질적, 법적 소유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법인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신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조선족의 국민 또는 국민에 준하는 시민권 지위가 바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었다. 조선족의 시민권적 지위는 한국 정부가 한국의 2차 노동시장에 노동력으로서 조선족을 효율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다. 일부 조선족은 이 지위를 집거지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의 자율성으로 활용했고 또 일부는 사업가가 됨에 법적 지위로 활용했다. 국가의 시민권 정책은 조선족 개인의 자율적인 경제 활용을 통해 집거지 노동시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역설적 조건으로 역할을 한 셈이었다.

VIII. 결론: 조선족 집거지의 ‘시민권’적 함의

1980년대 중후반부터 조선족은 다양한 시민권적 지위로 한국의 2차 노동시장에 편입했다. 이 인구의 증가곡선은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2007년 방문취업제도 시행 및 재외동포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두 번의 급증은 또한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있기도 했다. 재한 조선족 인구는 한국의 경제·산업 구조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과정에 출현한 집단으로 볼 수 있었다.

재한 조선족 인구의 대다수는 중국 조선족 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놓인 집단이었다(이진영·박우 2009). 이들의 한국 내에서의 시민권적 지위는 한국에 진입하는 과정에 중국에서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규정되었다. 출신지에서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에 근거한 시민권적 지위는 비록 이들에게 한국의 2차 노동시장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노동환경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거주지를 선택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선택은 한국의 충화된 거주환경과 결부되면서 구로공단 지역으로의 밀집 거주로 이어졌다. 이 공간적 밀집은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한 조선족 집거지를 태동시켰다.

재한 조선족 개인의 사회경제적 자율성은 시민권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었다. 재한 조선족 개인들은 제도의 틀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민권 지위를 변경하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노동자 신분에서 외국국적동포노동자, 외국국적동포(또는 재외동포), 영주, 국민 등의 신분으로 변경했고 현재도 이런 움직임은 진행 중이다. 재한 조선족 개인이 시민권적 지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은 한국 정부가 이들을 효율적으로 2차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자 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 시민권적 지위는 조선족 개인들에 의해 한국에서 장기거주 또는 정주에 필요한 자격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고용 기간과 거주 기간이 엄격하게 연동됨으로써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노동을 제공할 수 있고, 노동을 제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미숙련, 저소득 임시노동자와 달리 조선족들은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다.

재한 조선족의 한국 거주는 비단 개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력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확대와 이로 인한 유입 정책의 지속적인 완화는 조선족 가족 구성원의 한국 입국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도 했다. 개인이주는 가족이주로 변화했고 상당수의 조선족들이 한국에 가족 단위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의 자녀는 한국의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있었다. 부모의 시민권적 지위의 보장은 자녀 지위의 보장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가족단위의 거주는 조선족의 한국 정주를 뒷받침했다.

마지막으로 재한 조선족에게 부여된 시민권적 지위는 제도적으로 조선족 노동력이 한국의 2차 노동시장에 고용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조선족 사업가에게 고용될 수 있는 자격도 제공했다. 동시에 이 시민권 지위는 재한 조선족들 중 사업에 능한 일부 사람들이 법인을 소유할 수 있는 법

적 자격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이렇게 제한 조선족들은 집거지라는 공간적 영역 내에서 고용과 피고용의 수직적 경제관계, 즉 ‘이주민 경제(ethnic economy)’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족 노동력을 한국의 2차 노동 시장에 효율적으로 편입시키고자 고안한 시민권 정책은 조선족 내부의 고용관계를 제도적으로 일조하는 역설을 낳기도 했다.

서울 남서부의 조선족 집거지는 한국 국민, 국민에 준하는 영주, 재외동포와 동포산업인력 등의 시민권적 지위의 정주 조선족으로 구성된 ‘집거지 노동시장’(또는 조선족 ‘집거지 서비스 경제’)이었다. 한국 정부가 조선족에게 시민권적 지위를 부여하여 산업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했을 때, 이들을 구로공단 지역에 장기적으로 거주시키고, 이들의 가족을 재결합시키고, 집거지 노동시장을 만들고자 의도했다는 충분한 근거는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국가의 시민권 정책의 목표는 능동적 제한 조선족에 의해 합리적으로 활용되고 재해석되었다. 흔히 이주민의 시민권 지위에 관한 연구는 국가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국가에 의해 규정된 시민권 지위에 개인들은 완전히 수긍하는 것만은 아니다. 개인은 이 지위를 자신의 방식대로 활용하기도 한다. 집거지 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민권 지위의 요구로 이어지는 정치적인 측면을 배태하기도 했다.⁸⁾ 따라서 집거지 구성원의 시민권적 지위와 이 구성원의 실제 행위(법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의 내용을 함께 고려할 경우, 조선족 개인들의 수직적·수평적 사회경제적 관계로서 집거지(enclave)는 노동시장분절의 양상뿐만 아니라 일종의 ‘시민권 실천(citizenship practices)’으로서(Turner 1993, 2-3; Chang & Turner 2012, Turner & Chang 2012) 전환기 한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한 측면을 설명해 주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⁹⁾

8) 2003년, 재외동포법 제정과 그에 대한 반발 및 위헌 소송이라는 집합 행위가 있었다(박우 2011).

9) 이제 이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성격은 조선족 사업가, 가족 등의 집거지의 미시적인 행위자 혹은 체도에 주목할 때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김현선 (2010).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식.” 『사회와 역사』, 제87호, pp. 231-264.
- 박광성 (2006). 『세계화시대 중국 조선족의 노동력 이동과 사회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우 (2011). “한국 체류 조선족 ‘단체’의 변화와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제91호, pp. 239-265.
- _____ (2012). “조선족의 한국 이주와 정착 20년: 이주노동자와 동포 사이에서.” 『조선족의 신이주와 콘텐츠기획』. 재외한인학회 국제학술회의, pp. 1-13.
- _____ (2013). 『2013 가리봉동 사업체 조사』.
- _____ (2015). “조선족 사회의 분화에 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37호, pp. 89-120.
- _____ (2017). “‘초국적 상경’과 서울의 조선족.” 서우석·변미리·김백영·김지영 외 편. 『서울의 사회학: 서울의 공간, 일상 그리고 사람들』. 나남.
- 박우·박준도·정영섭 (2015). 『중국 출신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과 생활세계 연구』.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 박재영·강진구 (2016).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역과 거주공간 확대에 관한 연구: 가리봉동 구로동 대림동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53호, pp. 225-290.
- 방성훈·김수현 (2012). “한국계 중국인 밀집 주거지의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19권, 제2호, pp. 39-68.
-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6). 『관악 20년사』.
- 서울특별시 구로구 (1997). 『구로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1996). 『향토문화지』.
- 손정순 (201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역의 산업구조 분기와 주변부 서비스업의 확산.” 『산업노동연구』, Vol. 18, No. 1, pp. 273-311.
- 양한순·박우 (2013). 『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 서울특별시, 외교부 (1991). 『외교백서』.
- 이상철 (2012). “수출산업단지의 형성과 변모: 구로공단(1963-1987년).” 『동향과 전망』, 제6권, pp. 223-263.
- 이영민·이용균·이형욱 (2012). “중국 조선족의 트랜스이주와 로컬리티의 변화 연구: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5

- 권. 제2호, pp. 103-116.
- 이영민·이은하·이화용 (2014). “서울시 중국인 이주자 집단의 거주지 특성과 장소화 연구: 조선족과 한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7권. 제2호, pp. 15-31.
- 이정현·정수열 (2015). “국내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1권. 제2호, pp. 304-318.
- 이진영·박우 (2009). “재한 중국조선족 노동자 집단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14권. 제2호, pp. 99-119.
- 이창호 (2007). “한국화교의 사회적 공간과 장소: 인천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수·윤금진·김현임·준영하 (2008). “서울 이태원동 일대의 이슬람 타운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8권. 제2호, pp. 47-86.
- 정병호·송도영 엮음 (2011). 『한국의 다문화 공간』. 현암사.
- 정수열·이정현 (2014). “이주경로를 통해 살펴본 출신국가별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발달 과정: 서울시 대림동 소재 중국 국적 이주민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제48권. 제1호, pp. 93-107.
- 조미정 (2015). “재한 조선족 초등학교의 교육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 대림동 D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중국국가통계국 (2011). 『중국통계연감』.
- 최병두 외 (2011). 『지구, 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2016). 『출입국외국인통계연보』. 법무부.
- 한국수출산업공단 (1994). 『한국수출산업공단30년사』.
- 행정자치부 (2008-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 _____ (2008-2016). 『주민등록 인구통계』.
- Chang, Kyung-Sup (2012). “Predicaments of Neoliberalism in the Post-Developmental Liberal Context.” Chang, Kyung-Sup, Ben Fine and Linda Weise (eds.). *Developmental Politics in Transition: The Neoliberal Era and Beyond*.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pp. 70-91.
- _____ (2014). “Transformative Modernity and Citizenship Politics: the South Korean Aperture.” Chang, Kyung-Sup (ed.). *South Korea in Transition: Politics and Culture of Citizenship*. London, New York: Routledge, pp. 163-180.
-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2012). “Introduction: East Asia and Citizenship.”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pp. 1-12.
- Koo, Ha-Gen (2002). *Korean Workers: the Culture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 Light, Ivan and Steven J. Gold (2000). *Ethnic Economy*. San Diego: Academic Press.
- Light, Ivan and Stavros Karageorgis (1994). "The Ethnic Economy." Neil J. Smelser and Richard Swedberg (eds.). *The Handbook of Economic Sociolog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647-671.
- Piore, Michael J. (1975). "Notes for Theory of Labor Market Stratification." Edwards, Richard C., Michael Reich and David M. Gordon (eds.). *Labor Market Segmentation*. Lexington, Mass: D.C. Heath and Company, pp. 125-150.
- _____. (1979). *Birds of Passage: Migrant Labor and Industrial Societ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rtes, Alejandro (1976). "Determinants of the Brain Drai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10. No. 4, pp. 489-508.
- _____. (1981). "Modes of Structural Incorporation and Theories of Labor Immigration." Kritz, Mary, Charles Keely and Silvano Tomasi (eds.). *Global Trends in Migration*. New York: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pp. 279-297.
- Portes, Alejandro and Robert D. Manning (1986). "The Immigrant Enclave: Theory and Empirical Examples." Olzak, Susan and Joane Nagel (eds.). *Competitive Ethnic Relations*. Orlando: Academic Press, INC, pp. 47-68.
- Sassen-Koob, Saskia (1980). "Immigrant and Minority Workers in the Organization of the Labor Process." *Journal of Ethnic Studies*. Vol. 8. No. 1, pp. 1-34.
- Seol, Dong-Hoon and J. Skrentny (2009).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Vol. 9. No. 2, pp. 147-174.
- Seol, Dong-Hoon (2012). "The Citizenship of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Vol. 16. Iss. 1, pp. 119-133.
- Turner, Bryan S. (1993). "Contemporary Problems in the Theory of Citizenship." Bryan S. Turner (ed.). *Citizenship and Social Theory*.

London: Sage, pp. 1-18.

Turner, Bryan S. and Kyung-Sup Chang (2012). "Whither East Asian Citizenship?"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pp. 243-254.

Wilson, Kenneth and Alejandro Portes (1980). "Immigrant Enclaves: An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Experiences of Cubans in Miami."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6. No. 2, pp. 295-319.

Wilson, Kenneth and W. Allen Martin (1982). "Ethnic Enclaves: A Comparison of the Cuban and Black Economies in Miami."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8. No. 1, pp. 135-160.

2. 기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6&strWrtNo=111&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50&strAllOrgYn=N&strThisPage=2&strFilePath=. (2017년 1월 2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7년 05월 17일 |

| 논문심사일 : 2017년 05월 26일 |

| 게재확정일 : 2017년 06월 22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4 No. 2 (2017)

A Study on *JoseonJok* Enclave in Southwest Seoul: A Citizenship Perspective

Piao You

(Dept. of Liberal Arts and Science,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broadly analyse the *Joseonjok* (Korean Chinese) enclave in Southwest Seoul under citizenship perspective. To do this it focus on the enclave's geograph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population of *Joseonjok*, the citizenship status of *Joseonjok* since coming to Korea, the changes of citizenship status of *Joseonjok* in Korea, residence period, family structur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between *Joseonjok* entrepreneurs and workers, and so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Joseonjok* enclave constituted with the *Joseonjok* who under the citizenship status of Korean nationality, permanent residency, overseas Korean, foreign Korean worker. The primary purpose of citizenship policy which authorized to *Joseonjok* is effective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Korea's development (or globalization). But paradoxically, the citizenship policy for *Joseonjok* also provide the conditions of formation of *Joseonjok's* socioeconomic relationship so-called "enclave labor market(or *Joseonjok* enclave service economy)". So, if we analyse the *Joseonjok* individuals' socioeconomic activity together with their citizenship status, then, enclave as a case, not only can be explained by the dual labor market framework, but also can explain a part of the state-citizen (society) relationship of Korea.

- Key words: *Joseonjok*(Korean Chinese), Southwest Seoul, Enclave, Citizenship Status, Neoliberalism